

통합특별법에 빠진 특례 이것 만든 쪽...

# 전남광주특별시에 실질적 재정·자치분권 부여해야

미래전략·농수산·광역교통 등 미반영·불수용 수도권, 특별법 전담TF 구성...중점 대응 특례 반영에 ‘총력’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앙 부처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인해 지방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질적 성과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특별법에 미반영되거나 수용이 거부된 내용이 수도권에 행정통합의 자초까지 우려되면서 정부의 결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주요 대응 특례는 현재 전기사업 특례와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설치·운영 등 안건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특례 조항으로는 전기사업과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분야를 비롯해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양수산업·해양레저 육성 등

농수산분야, 개발제한구역과 광역교통시설 등 공간·광역교통분야,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설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삶의 질 분야, 자치재정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정수 등 자치분권분야 등이다.

자치재정과 국립의과대학, 거점국립대학 등 일부는 미반영됐고, 또 부처에서 불수용하며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특례 가운데 전남도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전기산업에 관한 특례로, 3MW 초과~100MW 이하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도지사는 3MW 이하 발전사업만 허가 가능한 상황으로, 해상풍력 1기 당 10~15MW에 이르는 데다, 전남 도내 10개 대규모 발전단지 규모가 6.6GW에 달해 현행 규정으로는 1기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20MW까지 허가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중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공공수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미반영된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설치·운영과 국가거점국

립대학 육성 등도 특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전남·광주 제안 법률안에는 포함됐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미반영된 것으로,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군·형법전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에 특례가 주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연일 정부와 국회에 찾아 지역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

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가 선연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필요,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비 재정지원,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특구 지정,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시 도로사업, 대중교통 운영지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도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핵심특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전남 국립의대 설립 탄력...정원 100명 반영

2030년 개교 전제...도 “도민 30여년 숙원 해결” 환영  
2028년 조기 개교 목표로 후속 절차 본격 추진키로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의대 설립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7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날 영광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 14일 만이다.

의대 정원은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5058명으로 증원된 뒤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보정심이 이번에 의결한 양성 규모 방안에 따라 2027년에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대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 의

사는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제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 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 전원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고, 2028년 조기 개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구조적 의료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는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들,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해 온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오랜 기간 불

편과 불안을 감내하며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한 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이 2028년 조기 개교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선제적으로 충실히 갖추고,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에 걸맞은 권역 책임의료체계가 작동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학병원들은 향후 지역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이제 기다림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문턱에 섰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곡성·신안 등 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15만원 지급

전국 10개 군 이달말부터 시행

정부가 곡성·신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전남 곡성·신안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편의점·하나라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지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나주 양돈농장 ASF 확산 차단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 살처분·인접 시·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

전남도는 지난 9일 나주 봉황면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농장은 번식 전문 새끼돼지 생산 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날 영광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 14일 만이다.

전남도는 확진 직후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완료했으며, 도 현장지원관 2명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신속 살처분을 하고,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강화했다.

나주와 인접 6개 시·군·구(함평·무안·영암·화순, 광주 광산구·남구)의 양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이영남 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장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방역복·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매일 사육 돼지의 임상 관찰을 강화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초교 등 저학년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  
국무회의 의결...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

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오는 8월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 항목 중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선행급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스

▶▶1면 ‘이개호·정준호’서 계속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절체절명의 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출시표를 던졌다.

그는 “담대한 변화는 담대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1등 도시를 위한 도전은 뻔한 선택에서 불가능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40대에 깃발을 들었고, 미국에서는 클린턴, 오바마가 40대에 도전해 대통령이 됐다. 이 담대한 여정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를 AI 시대의 대전환으로 수도권에 당당히 도전. 서울에 버금가는 1등 도시를 만들 것을 강조하며, 호남

을 전국 제일의 특별시로 만들 ‘담대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광주공항 이전부지를 직접 거론하며 “이곳을 현대차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로보틱스 아틀라스·퍼지컬 AI의 생산·R&D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기존 산업도시가 안고 있는 규제와 노사 갈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간 혁명’을 통해 영산강을 축으로 광주와 나주, 해남, 무안, 신안, 여수, 광양을 하나의 산업 사슬로 연결하는 ‘호남 퓨처 벨리’ 구축 전략도 내놔다.

연구·에너지·반도체·정밀화학·해양리조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한민국 최고 의 초첨단 산업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